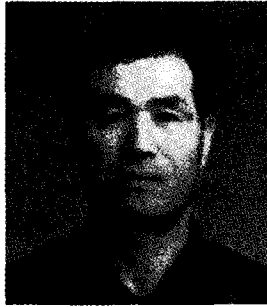


가축분뇨 규제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박 상 술
서울우유 화성검정협회의 회장

최근 우리 낙농육우산업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파문과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은 UR(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WTO(국제 무역기구) 체제출범과 더불어서 이다. 한동안 생산자, 소비자를 실망과 충격으로 회오리 치던 95년 10월 22일 MBC TV에 보도된 고름우유 파문으로 말미암아 유업체와 유가공협회의 이진투구의 원유 위생논쟁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깨끗하고 고품질의 좋은 우유를 소비자들이 마실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병든 소를 TV에 방영하므로 시청자들에게 해롭고 저질의 쇠고기를 먹었다는 자신들의 분노를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가운데 이에 보전복지부에서는 쇠고기에도 항생물질 잔유물 검사를 본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생산자들도 도덕적 인식을 가지고 소 출하 7일전부터는 항생제 또는 항균제 투여를 금하고 있어 현재 소비자들에게 육구충족을 위해 국민건강에 해롭지 않은 위생적 쇠고기를 완전식품으로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 96년 3월에는 광우병 파동이 발생하였다.

이역만리 비행기로 13시간 소요되는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하게 언론에 보도되어 쇠고기 소비둔화를 야기시켜 소값 하락을 자극하였으며 96년 7월에는 0-157 대장균이 소의 간에서 발생하여 감염된 소의 간을 먹을때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충격적인 기사보도 역시 육우산업에 거센 태풍이 몰아쳤다.

그로인하여 마장동 도살장과 축협 공판장 주변의 부산물 시장이 부산물 판매 부진으로 한산하여 파리 날릴정도의 소비자들은 쇠고기 먹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짙어지고있는 가운데 이때 우리협회 김남용 회장은 소비자를 위로하고 안심할 수 있게 직접 부산물 시장을 둘러보며 소의 간을 시식하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광우병 파동, 0-157 대장균 일련의 파문과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정부의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정부의 소값인하 정책과 맞물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값이 전반적으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금년 3월까지 20만원으로 폭락한 수송아지값과 비육우값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림부

는 축협을 통해 소수매하도록 하였고 또한 소
값 안정대책 발표 이후부터 수송아지값이 20만
원 선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지난 95년 10월 원유 위
생논쟁파문 사건은 일년도 채 안되어서 또다시
우유에 한파가 몰아닥쳤다.

DOP와 DBP물질이 우유에 함유되었다는
내용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에
의해 유출되어 언론에 제공되었으며 이러한 우
유를 마시면 생식기 계통의 암의 발생률이 높
다는 언론보도에 이번에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사소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보건복지부와 언론
의 보도를 불신하는 여론이 거세기도 하였지만
화를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실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우유에 함유되었다
면 사전에 해당업체에게 검출결과를 통보하여 개선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도록 해야하고 도덕적 행정치
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해한 발암물질의 기준치를 제도로 정해놓
고 발암물질의 기준치를 이행하지 않고 초과하여 검
출이 되었을때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왜곡된 기사의 보도는 너무나 당돌하다.

해외 낙농 선진국들도 유해의 기준치나 규제를 하
고있지 않다고 하는 조선일보 사설에 논평을 하기도
했다. 또한 우유 아닌 다른 플라스틱 용기의 음료수
병에도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무수히 많다. 과연 이
들 음료수는 식류로 안전한 것인가.

유독 우유에 표적을 삼고 논란을 일으켰는지 보건
복지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러한 무모한 사건의
보도에 전국의 낙농가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전국대회
를 과천종합청사에서 개최하여 낙농가들은 소리높혀
외쳤다. 당사자의 사직은 물론 앞으로 재발의 방지를
보건복지부의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다짐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년이 멀다고 또는 3~4
개월 간격으로 우유와 쇠고기를 국한해서 동네북 인
양 두들기고 있다. 이제 앞으로 더이상 우리 낙농가
에게 공포와 불안으로 휩싸이지 않도록 당국의 따듯
한 배려로 하여금 안정적 낙농육우산업에 여념없이

**이제 앞으로 더이상 우리 낙농가에게
공포와 불안으로 휩싸이지 않도록
당국의 따듯한 배려로 하여금
안정적 낙농육우산업에 여념없이
중사를 하면서 생산활동에 전념하여
현대 소비자 욕구에 충족하는 위생적
완전식품이며 고급식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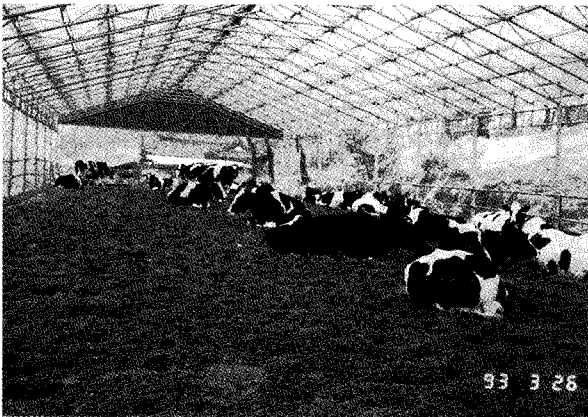
중사를 하면서 생산활동에 전념하여 현대 소비자 욕
구에 충족하는 위생적 완전식품이며 고급식품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낙농육우 농가들은 낙농육우산업에 다
양한 고통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각종물가 상승, 배합사료값 인상, 낙농 기계류
와 농기계류, 건물 및 기계 감가상각비, 제반경비등
의 원유 생산원가 부담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현실
에 있다.

지금의 수송아지값 20만원은 450%까지 폭락한 가
격이며 낙농육우산업의 불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이다. 이로인해 생업을 포기하는 양축농가가 계속적으
로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서울우유 조합원 4백여
명이 탈퇴를 하였다. 정부의 2001년 수입 자유화를
전면 개방화에 따른 대응전략이 낙농가 호수 1만호로
감소정책을 하여 변함없이 추진하여 실현될 것으로
본다.

지금 정부의 낙농정책 방향은 전업낙농을 적극 육
성하고 있다. 신종 융자 지원자금으로 명분을 갖고
전업 양축농가에게 경영자금을 융자지원하겠다고 하
는 자금의 재원조달이 별도의 재원확보를 하여 융자
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기존의 양축자금을 회
수해서 전업 양축가에게 융자지원은 모순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소규모 양축가들이 주로 사용하던
저리 자금지원을 단절하여 소규모 양축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안타까



운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규모 양축을 포기하는 양축가에게 사후 실업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취업보장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실업을 야기시킬 도의적 책임으로 확실한 대책 확립이 있어 주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낙농육우 산업기반은 조사료가 취약하고 사료곡물도 수입에 완전 의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낙농육우 산업이기 때문에 항상 빙상일각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환경부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앞서 순간 어려웠던 사건을 낱낱히 열거하여 독자들을 다시 일깨워주기위해 언급하였지만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농림부는 우리나라 낙농육우산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뒷받침하여 국제경쟁력에 우위를 하도록 전업농으로 육성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환경부는 우리나라 축산을 말살하기 위해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이 대폭 확대규제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식량산업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외면을 하였고 건설교통부의 개발 제한 구역 내 형질변경 건축면적이 제한된 점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부처간의 일괄성없는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입법예고는 마련이 지표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소규모 낙농육우산업을 더욱 어려움에 시달리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그동안 어렵게 성장한 축산기반은 하루 아침에 붕괴할 것으로 보아 이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시행령 개정

안 입법예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본다.

환경부는 환경보존을 위한 범국민적인 환경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할 때 정부의 환경정책 추구는 국토의 산과물이 깨끗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이른바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양축가를 너무나 외면한 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지탄을 아니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UR 이후 국내외 모든 산업은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므로 수입 전면 개방화, 세계화 파고에 대응으로 낙농육우 산업분야에 막대한 자금 투여로 경쟁력 제고 또는 선도농어가 지원자금으로 농가에서 필요로하여 채권확보가 확보화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양축 농가들은 생산성 향상에 우선하여 노동력 절감하는 차원에서 활용하였고 이리다보니 비수익적 고정자산인 축사와 생산시설 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

지난 3년동안 붓물 터지듯이 너도나도 서로하고자 하여 지금 농촌마을 축산지역은 길게 우뚝 솟은 건물은 함석 또는 라이트 구조의 개방식 축사에 쪼트소 아니면 한우사육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한국의 축산업에 종사하는 양축농가들의 축사형태 및 사양관리 또한 노동형태가 선진국 수준의 도약으로 축산환경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 초만 하더라도 슷송아지 80~90만원 하였기 때문에 장기자금 사용은 원리금 상환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는 대로 장애없이 마친 오늘날의 현실은 앞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여 우려가 된다. 이러한 현실의 상황을 감안해서 환경부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백지화 하여야 한다.

그동안 양축농가들은 농축협을 통해 축산시설에 필요한 각종 융자금에 대한 부채가 많은 양축가는 자기 자본비율하고 맞먹을 정도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다. 환경부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하여금 운동장도 사육시설로 포함한다거나 폐수배출 시설 하여야 한다고 했을때 농가부채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아 양축 농가들은 재무구조 불건전한 농가의 축산업은 도산이 우려가 된다.

그러니만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대상을 축산의 면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운동장을 포함하는 것과 신고대상 축산 배출 시설의 규모 현행축사 350㎡이상에서 축사 200㎡이상 또는 간이축사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대상규모축사 120㎡에서 축사 20㎡ 이상으로 면적을 축소하여 확대 개정안을 입법예고 있는데 젓소의 경우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질병 발생원인이 된다. 소화기 질환과 번식장애 발굽불량 난산률이 높아 경제 수명이 단축되어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시행령 개정안 입법 발표 이전에 개발 제한 구역 내 양축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 규제면적은 해제되어야 하고 양축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부가 수혜자 부담으로 환경세를 새로 만들어 재원을 확보하여 양축 농

환경부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하여금 운동장도

사육시설로 포함한다거나 폐수배출 시설 하여야

한다고 했을때 농가부채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아 양축 농가들은

재무구조 불건전한 농가의 축산업은

도산이 우려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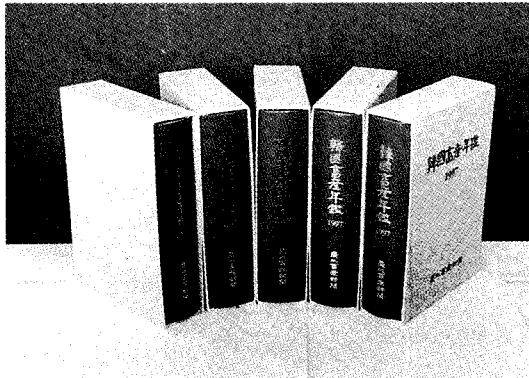


가들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자금을 보조 지원하여야 한다.

향후 양축가들은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여 안정소득으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따라서 앞으로 21세기 우리나라 낙농육우산업은 정부의 낙농육우 보호정책 방향으로 전개되었을때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것이다. ☺

(필자연락처 : 0331-292-2755)

1997년 판 韓國畜産年監 발간



국내 축산업계와 축산연관산업계의 주요 동향과 통계자료 등을 집대성한 1997년판 한국 축산연감이 발간됐다.

농수축산신문사가 발간한 1997년판 한국축산연감은 농림수산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의 권위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특집과 제1편 총설, 제2편 각론, 제3편 통계, 제4편 편람, 제5편 부록 등 모두 5편 33장으로 편찬, 본격적인 개방화시대에 진입한 96년도의 축산업 및 연관산업별 현황을 상세히 조명했으며 축산관련 최신 통계 자료를 폭넓게 수록했다.

크기 : 4×6배판 양장본 가격 : 80,000원
구입문의처 : 전화 585-0091(구내번호 100), FAX : 588-4905~6